



2012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2013. 09

한겨레
THE HANKYORE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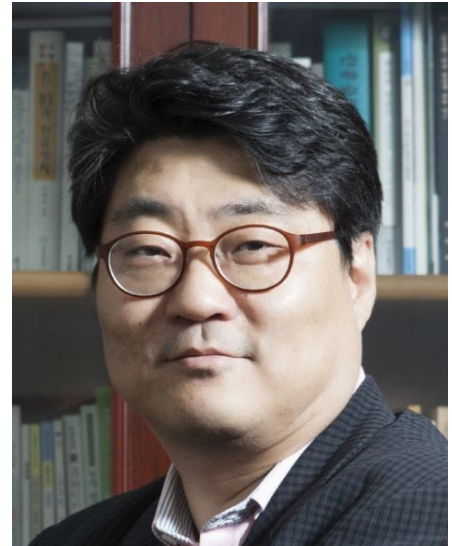


1. 글로벌콤팩트 지지선언문
2. 한겨레신문 소개
3. 한눈에 보는 2012년 한겨레
4. 유엔글로벌콤팩트10대원칙
5. 10대원칙 이행내용_보도
6. 10대원칙 이행내용_연구·교육
7. 10대원칙 이행내용_경영

1987년 창립되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참 언론을 표방하고, 시대정신의 개척자 역할을 해온 한겨레신문사는 참 언론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으며, 네 번째로 '2012 한겨레신문사 CoP'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 보고서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한겨레신문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1988년 5월 한국 개별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공정보도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왔으며, 사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보호', '노동권보장', '환경보호',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세부시행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국경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위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겨레신문사 및 자회사가 발간 중인 각종 매체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취재 보도 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크탱크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기업의 사회책임경영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등의 깊이 있는 활동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계기로 한겨레신문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겨레신문사가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 09

대표이사 사장 양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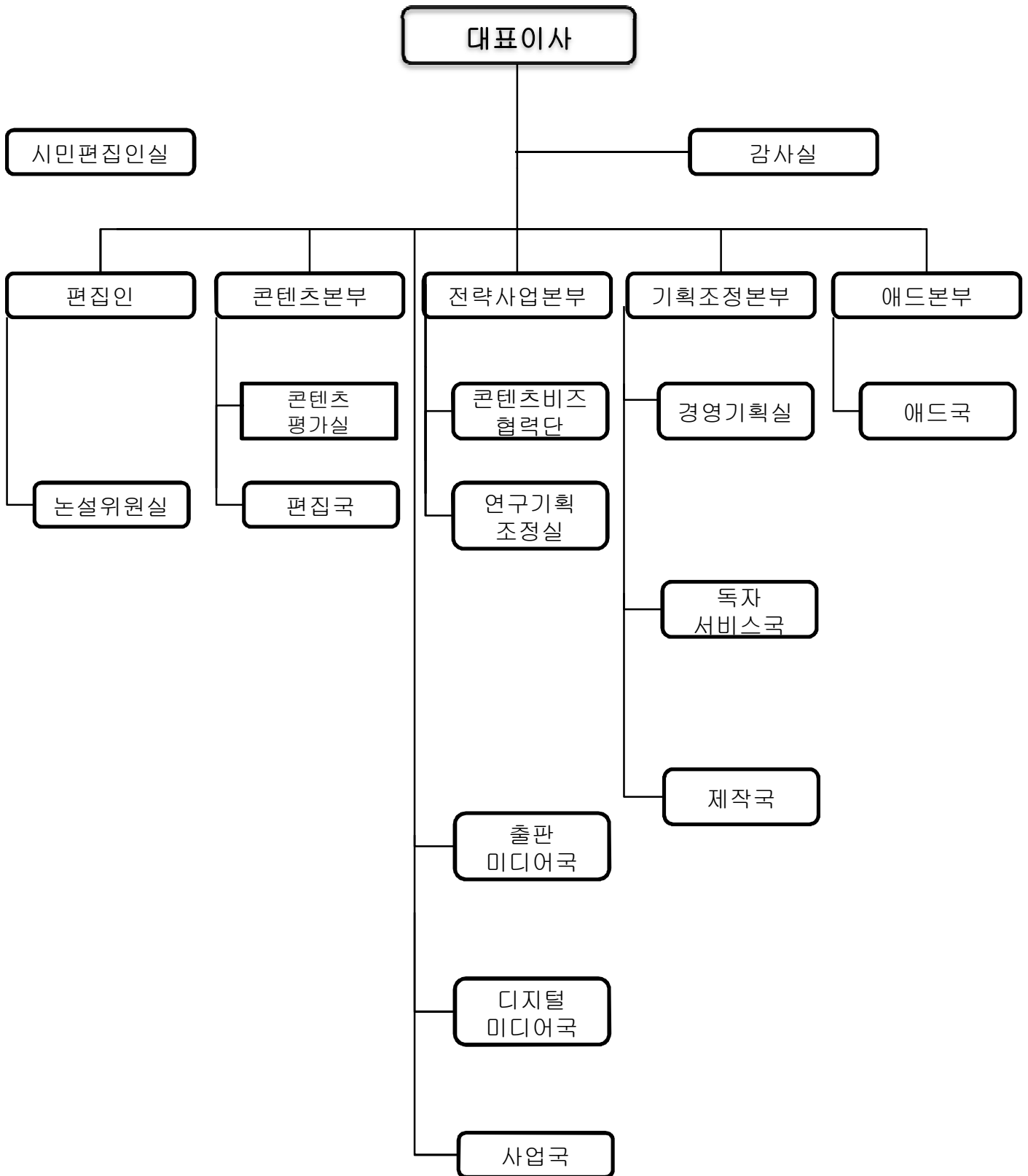
기업 개요

한겨레신문사는 한국 민주화의 결실로 1987년 12월 창립되었습니다. 정치, 경제적 권력에서 독립된 자유언론을 바라는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어 설립한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사회약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요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한 보도에 앞장서고 있으며, 종합일간지 <한겨레>를 포함해 주간지 <한겨레21>, <씨네21>, 월간지 <이코노미인사이트>, <나들>, 인터넷한겨레, 웹방송하니TV 등 다양한 매체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업 현황

업 체 명	한겨레신문(주)
사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간 • 서적 및 출판인쇄 •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 광고 제작 및 판매 • 교육 서비스 ▪ 오락, 문화 및 스포츠 ▪ 방송채널사용 ▪ 부가통신사용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임직원 수	543명
UNGC 가입일	2007년 8월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5번지 한겨레신문사 빌딩
연 락 처	1566-9595



보도활동



- 2012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12회 수상
- 2012년 11월 언론재단에서 제22회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 수상
- 제15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수상

연구 및 교육활동

- 아동친화경영 우수사례개발
- 풀뿌리사회적기업가 학교(MBA/청년혁신가 과정)
- 2012 아시아미래포럼 (Asia Future Forum) 개최
- 한·중·일 CSR 공동연구
- 한·중·일 기업 사회책임경영 평가 East Asia 30



경영활동



- 경영설명회 정례화
- 퇴직자에 대한 학자금 보조 시작
- LED 조명 변경으로 전기에너지 절감
- 임직원 건강검진 비율 100% 달성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을 준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도내용	성과
인권	“간첩딱지 붙이기 놀이는 그만-‘죽어서도 상처입은 용’ 윤이상 부인 이수자씨 처음 입을 열다”(한겨레신문, 2012년 1월 28일)	사회적약자인 노숙인과 청소년들이 물증 없는 강압수사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들의 삶을 보도함
	"살해된 통영 초등생, 홀로 늘 배굶는 아이였다" (한겨레신문, 2012년 7월 24일)	
	"100일간 6명이 목숨 끊은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비극" (한겨레신문 2012년 8월 28일)	
	“무죄의 재구성-노숙소녀 살인사건” (한겨레신문 2012년 8월 29일)	
	“또 다른 성범죄, 청소년 매매-거리의 아이들이 운다” (한겨레신문 2012년 9월 19일)	
노동	“회사가 지옥, 회 못 먹자 회식을 매번 회로...” (인터넷한겨레 2012년 2월 2일)	직장 내 따돌림 문제를 고발하고,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성추행, 폭력 등의 문제를 보도
	"두근거리며 삼성행 버스를 탔던 소녀들은..." (한겨레21 2012년 7월 9일)	
	“만도 SJM, 기습 노조탄압...혹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한겨레신문 2012년 7월 28일)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깬다" (한겨레신문, 2012년 9월 24일)	
“한국인 선원은 때리고 갑판장은 성추행” (한겨레21 911호)		
환경	"제돌이의 운명-14일 제주소 '야생방사'세기의 재판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자유를 얻는가"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3일)	불법포획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방사 문제를 보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 산업계의 실태를 고발
	“한국과 달리...영국 산업계 “성장의 색깔은 녹색” (한겨레신문 2012년 11월 20일)	
	“제설제 살포 급증에 팔당호 비상” (한겨레신문 2012년 12월 26일)	
반부패	"정수장학회, 부산이 술렁인다" (한겨레신문 2012년 2월 4일)	국내재벌에의 과도한 부의 집중과 고위계층의 뇌물, 비리문제를 고발함. 지하철 9호선의 적자가 맥쿼리의 무분별한 이익 챙기기에 의한 것임을 보도
	"과도한 부의 집중 /0.1% 재벌, 서민의 삶 포위하다" (한겨레신문 2012년 2월 13일)	
	“최시중.박영준에 61억 주고 인허가 청탁”(한겨레신문 2012년 4월 23일)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을이자 챙긴 탓" (한겨레신문 2012년 4월 18일)	
	“이시형씨, 큰아버지에 현금 6억 빌려 큰 가방에 넣어와“ (한겨레신문 2012년 10월 19일)	
“한겨레 '불법사찰 재수사 기록'입수-이 대통령, 민간인 사찰 '비선라인'알고도 비호” (한겨레신문 2012년 12월 5일)		

- 한겨레신문은 2012년 8월 29일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들이 물증 없는 강압수사로 피해를 받고 있는 내용으로 사회 소외계층의 인권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 2012년 7월 24일에는 아동 성범죄 피해 아동 기사를 통해 아동 인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처음엔 노숙인의 범행이라더니 이제는 가출 10대가 '진범'이라고..

무죄의 재구성

노숙소년 살인사건 ① 2판

독방엔 한기가 들었다. "텔~미, 텔~미." 이따금 누군가 취신가요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상스런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면 열방재 소자들이 발작적인 신경질을 냈다. 2008년 1월 경기도 수원구치소엔 별 한 점 들지 않았다. 한 정립(가명·당시 17살)양의 통통한 뺨에 거친 각질이 허영게 일곤 했다.

독방에 열마를 갇혀 지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루가 까마득했다. 잿빛 벽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듯했다. 구치소에서 벗어나는 꿈을 꾸다 잠에서 깨면 눈물로 베크듯이 흥건했다. "정말 안 죽었어요." 범행을 부인할 때마다 검사는 한양을 독방으로 보냈다.

수원지검 본청 별관 조사실로 끌려온 것은 2008년 1월 23일이었다. 몇달 전, 한양은 거러에 주차된 차에서 돈을 훔쳤다. "그런 배가 많이 고맙다"고 한양은 나중에 말했다. 한양은 가출 청소년이었다. 친엄마는 한양이 5살 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용달차를 타고 가족 나들이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살림은 망가졌다. 새 어머니는 한양에게 모질했다. 한양은 종종 일 없었다.

새 어머니는 교복 사줄 돈이 없다고 했다. 한양은 중학교 졸업 후 포기했다. 슬픈 아버지는 "넌 보면 네 입마가 생각난다"며 한양을 때렸다. 3살 아래 동생에게 밥상 차려주는 일도 지긋지긋했다. 12살 소녀는 집을 나와 버렸다. 수원역 앞 광장에는 100여명의 노숙인들이

있었다. 그들 틈에 섞여 들어간 한양은 대합실 의자에 쪼그려 앉았다. 새벽이면 근처 교회에서 공짜 밥을 먹었다. 추운 날엔 청소년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식당 전단지 풀리는 일로 혼돈을 벌었다. 구걸도 했다. 돈이 생기면 켜질방에 갔다.

아버지·새엄마에 얻어맞던 소녀 수원역 노숙인들 틈에서 살기도 난데없이 수원지검에 불러갔더니 노숙소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검사 "네 남자친구가 자백했어"

처지 비슷한 또래들과 어울려 초등학교생에게 '병(갈퀴)을 뜯거나 빈 차를 탈기도 했다. 그러다 불잡혀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 규정을 어기고 또다시 가출해 안양에 있는 소년분류시설원에 들어갔다.

"뭔가 하나 터졌구나." 소년분류시설원에 있다가 난데없이 수원지검에 불러가면서 한양은 옛 잘못 가운데 하나가 들끓는 것이라 생각했다. 소녀의 짐작은 틀렸다.

적록은 따로 있었다. '상해치사'였다. 검찰은 2007년 5월 14일 수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노숙소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한양을 구속했다. 이미 7개월 전 20대 노숙인 2명이 범인으로 구속됐고, 그 가운데 1명은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였다. 노숙소년을 죽인 진짜 범인이 노숙자에서 가출 청소년으로 돌변해 가는 반복판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한양은 잘 몰랐다. 그 사건을 알고는 있었다. 함께 어울리던 20

대 노숙인 아저씨들이 10대 소녀를 죽였다고 하여 한양도 놀랐다. 당시 한양과 친구들은 폐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수원역에 나온 형사들을 도와주기도 했다.

"친구들 모두 자백했어. 네 남자친구 차승진(가명·당시 19살)이 너랑 같이(살인)했다고 다 이야기했다고." 한양은 검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친구들이 같은 죄목으로 불잡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다. 우리가 사담을 죽였다고? 살뜰히 믿고 따랐던 남자친구가 나를 지목했다고?

갑갑한 가슴을 치며 소녀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 "차라리 장박으로 뛰어내리거나, 제 목을 그어버리고 싶었어요." 한양은 나중에 말했다.

검사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설명해줬다. "변호사 사줄 가족은 있어?" 검사가 물었다. 가출해 지내는 처지라는 걸 검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예가 떠올랐다. 낯통 일감마저 쪼개 벌이가 없는 터였다. 말병정이 말을 위해 변호사를 불러줄 것 같지 않았다. "아빠가(변호사 선임) 해주시길 안 해주실지...?" 한양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검사는 말했다.

"그냥(혼자) 할래요." 그 대답이 초래할 사태를 당시에는 몰랐다. 자신을 살인범으로 기소하려는 검찰에 혼자 힘으로 맞서겠다고 답했을 때, 한양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17살 소녀였다.

임지현 기자 umkja@hani.co.kr

④ 조작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5명의 10대 노숙 청소년이 거짓 자백하게 된 경우가 이어진다.

살해된 통영 초등생, 홀로 늘 배굶는 아이였다

열살 아이는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냈다. 23일 만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봉마을 180여가구 500여명의 주민들은 한아무개(10)양을 '배굶민 아이'로 기억한다.

"친구 집에 가서 허파 없이 냉장고 음식을 꺼내 먹어서 동네 마을을 조금 사기도 했지요." 주민 이서영(가명·62)씨 집에도 한양은 찾아왔다. "토마토 먹어도 돼요?" 이씨는 마당에 토마토를 길었다. "먹을 걸 생겨주는 사람이 집에 없어서, 늘 배고파서 그런 거지 살어 그러라고 했지요." 그 뒤 아이는 가끔 집에 왔다가 병에 들어오진 않고 마당에서 토마토만 따서 먹고 돌아갔다.

▶관련기사2편

나이답지 않게 뇌졸중다운 말을 들었지만, 실은 의로운 아이였다. '저녁 6시 전엔 집에 들

일용직 아버지는 밤늦게야 귀가 새엄마는 한달여전 집 나가

피의자 집에 자주 드나들며 냉장고 음식 꺼내먹곤 해

어려운 환경 탓 보살핌 못받고 흉악한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

어거지 않더라고요." 마을 구멍가게 여주인은 해질녘 당산나무 아래 혼자 서성이던 한양을 기억한다. "새어머니가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친어머니는 한양이 두살 때 이혼했다. 건설 일용직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 나가 밤늦게 귀가했다. 하루 6만~7만원을 벌었다. 열살 위 오빠는 새벽까지 동네 통닭집에서 일하고 낮엔 짐을 졌다. 다방에서 일하는 새어머니를 3년 전 맞았지만 "파리새 같은 길로 놀 아이를 때렸다"고 여러 주민들은 말했다. 그 새어머니마저 한 달 전 집을 나갔다.

한양의 아버지(58)는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고 힘입어 말했다. 주민들은 "말은 있지만, 밥 지어 먹여주는 어른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새벽 4시 55분께 한양은 잠에서 깬다. 동네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는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는 가끔 한양에게 먹을

것을 사줬다. 한양이 전화기에 대고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침 7시 35분께 학교로 향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있던 한양을 주민 이서영씨는 보았다. 그러나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담임교사가 한양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일 나간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끼워주는 사람이 없어 늦잠을 자는 편이긴 했지만 결석한 적은 없었다'고 한양의 고모는 말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버스는 한시간 간격으로 왔다. 늦장 자는 마을버스를 놓치면 한양은 주민들의 차를 얻어타고 학교에 가곤 했다. 이날 버스정류장에서 있던 한양은 김아무개(45)씨의 11트럭에 올라탔다. 한양은 김씨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주민들은 '아이가 김씨 집에 가

서 냉장고 음식을 꺼내 먹은 적이 있는데, 김씨 아저씨가 아이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한양을 차에 태운 김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날 밤 10시, 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한양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다. 친척들은 '자랑받지 못하고 커서 누군가에게 버려주고 집을 주면 매우 잘 따랐다'고 한양을 회고했다. 따뜻한 정과 밥에 굶주렸던 아이는 친절한 어른을 잘 따랐다. 배고픔과 외로움은 아이의 악절이 됐다. 이를 악용한 어느 어른은 아이에게 흉악한 손길을 뻗었다. 실종 7일째 만인 22일 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경국 기자, 통영·북생원 김규남 기자 jk@hani.co.kr

- 한겨레신문은 2012년 2월 2일 '직장 내 만연하는 따돌림 문제'와 관련해 평등한 고용 문화 보장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2012년 7월 28일 만도, SJM이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을 통해 노동조합원의 인권 보호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낮은 목소리

“회사가 지속... 내가 없어야 고통이 끝날까요”

직장에서 '성희롱' 징벌은 어떤을

“성희롱은 아이들을 제재하는 일이 아니다. 최근 한 직장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한겨레 | 오늘 |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

차 부품 사업장 동시 행동 SJM 노조원 30여명 다쳐 노조 "사건기화된 시나리오"

생산 위주화 등의 이유로 노사가 갈등을 빚어 온 사업장에서 27일 잇따라 직장폐쇄 조처와 함께 용역직원들이 투입됐다. 진국 금속노조는 "최신 폭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에 맞춰 용역이 대우로 동원돼 파업 사업장을 잇따라 점령할 것을 보면 사건이 기화된 노조 파괴 시나리오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케이엠(SJM) 산공장에서 회사가 고용한 용역직원 300여명과 회사의 직장폐쇄 조처에 맞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150여명이 출동했다. 경찰과 노사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4시에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이 회사 본공 과 공장 안으로 밀려들고 곧바로 농성 동으로 무장 한 용역직원들이 진입하다가 노조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중 30여명이 다쳤으며, 10여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장 밖으로 쫓겨난 노조원들은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등과 함께 회사 정문 앞에서 장 의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주권언속 2표제제를 도입한 이 회사는 생산과 회계의 국에서 생산한 재료의 국내 역수입(내수) 등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갈등을 빚어왔다. 회사는 측은 지난달 승선부터

조가 과량언속과 생산 위주화 결정 등을 요구하 여 친덕농성과 부서별 순환파업을 벌이던 이날 새벽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단 업 과정에서 인사·경쟁권과 관련된 사안을 유단 하게 요구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고, 회사 의 생산과 시설 보호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결정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진 금속노조 에스케 엠 지회장은 "직장폐쇄 통보조서 받지 못한 사 태에서 사측의 용역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공장 에 쳐들어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만도기계 명백·문학·익산공장에도 이날 오후 2시40분경 수백명의 용역이 들어와 조랑한 출입을 막고 있으며 사측 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만도기계지 부의 8시간 파업으로 공장이 비어 있던 중 출동 한 앞세우지 않았지만, 사측이 이날 오후 8시 직 장폐쇄를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도기계 노사는 임근집합에서 임종자 이를 쏟아지듯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이날 동시다발로 이뤄진 용역 투입에 대해 "조직적 점령이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 노조 관측자는 "이날 새벽 서울 잠실에서 용역 300여명이 집결하며 에스케이엠에 집결했고, 인 천 현직경기장(용역 300여명)과 서울 삼양기계장 (500여명)에 용역들이 대우로 모이더니 만도기 계 3개 공장으로 쏟아져 공장을 점수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용역이 조직적으로 파업 사업장을 점령했다는 것은 공권력의 비호나 저지 아래 이 행진이라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사/경관 기자 김소연 기자 maria@hankyoreh.co.kr



정년 59주년-남북 구경하는 북쪽 관공경 권오성(왼쪽부터) 김민희(중) 두사원명 백성진 장군, 재직소 4사 서번 김민희(오른쪽)가 27일 경기도 파주 신시진 민면회 에서 열린 한국전쟁 휴전 협정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군사문화전시관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동안, 임원들을 포함한 북쪽 관공경들이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왼쪽부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 한겨레신문은 2012년 3월 3일 커버스토리로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의 불법 포획사실과 관련해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2012년 11월 20일 영국과 다르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산업계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커버스토리 3·4·5면
제돌이의 운명

14일 제주도 '야생방사' 세기의 재판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자유를 얻는가

**정부관계자 '한겨레21'에 밝혀
"민정수석실과 얘기 돼있다 말해"
'총리실 소행' 검찰발표와 배치**

국무총리실 공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 인멸 상황을 알 아는 정부 관계자는 2일 "최종적 청와대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 7일 오전 장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내일 총경실에서 지원관실을 입수수색한다고 한다. 오늘 오후로 (민간인 사찰을 한) 지원관실 평정팀의 평정사 인제가 전경의 (지원관실) 총경지원관실과 컴퓨터를 몰리도록 조치해라고 지시했다"고 <한겨레21>에 밝혔다. 이 문제

계부수준지. 컴퓨터를 강물에 갖다버려도 좋다. 민정수석실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어 경찰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7월 9일 지원관실을 입수수색했고 이에 앞서 장 전 주무관은 경기도 수원외 한 일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가우심(강한 자력으로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파괴하는 것)했다. 정부 관계자의 이런 주장은 당시 경찰의 수사결과와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은 전경과 전 과정이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장전수 전 주무관, 권동기 전 조사관이 실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지원관실 소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발표와 달리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수사기관을 사선 조종까지 했 것이다.

흔을 개설해 지원관실에 전년 인물로, 지원관실 실지. 운영에 있어 개입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문노사비서관의 직속 부하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당시에도 청와대가 증거 인멸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최 전 행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주미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받아 현재 미국 워싱턴에 있다. <한겨레21>은 최 전 행정관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으나, 그는 "온전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청와대의 증거 인멸 지시 의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면이후에 이르는 민간인 사찰 수사. 제1면 기류에서 드러난 부실수사 정황 및 추가 불법사찰 의혹 등은 9일 발행되는 <한겨레21> 901호에 나와 있다.

남방큰돌고래 '제이비디(JBD)09'는 3년 전만 해도 한라산 아래에서 헤엄치던 돌고래였다. 제이비디 09는 이제 '제돌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도기를 부린다. 10여년 전에 잡혀 온 고향이, 태포의 함께 정복을 하고 귀족이족 노릇을 부른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돌고래 공연업체인 퍼시픽엔드에서는 태산이(JBD 20), 은산이(JBD 21) 등 6마리도 마찬가지다. 국내 처음으로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는 야생방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단체인 한빛물류연구소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겨울대동행과 퍼시픽엔드에서 수를 밝히는 남방큰돌고래 불법 포획원 개제'를 하며 "그들이 갇힌 돌고래를 방사하도록 한 수산업에 따라 이들을 고향인 제주도 앞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제이비디'를 사인 오프닝이 공연되고 있다. 제돌이는 2009년 5월 14일 제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것을 발견으로 잡아 가졌다. 현재 수색 중인 남방큰돌고래는 2009년 12월 24일 이후로 돌아올 사람이 없다고 여겨진다. 강태은 신남기차 khran@hanco.kr, 고대연연구소 제공

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산다.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고래연구소는 2007년부터 야생에서 개체식별번호(JBD)를 붙이는 조사를



온실가스를 줄여내고 있는 국내외의 친환경발전소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9년부터 이들 발전소를 포함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된다.

한국과 달라...영국 산업계 "성장의 색깔은 녹색"

**영국산업연맹 보고서 퍼내
"저탄소 기술 투자 적극 유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지**

우리나라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산업계가 우리 산업계와 같은 것은 아니다. 영국 100대 기업 중 90여곳을 포함해 24만 여곳에 이르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국산업연맹(CBI)은 경기 절

체가 장기화되면서 영국 정치권에서 '녹색이 나 성장이다'라는 논쟁이 이어지자, 지난 7월 '성장의 색깔'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녹색은 성장을 보일 해를 뿐 아니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기도 나섰다. '녹색'을 위한 발안으로 이들이 제시한 것은 규제 완화나 온실가스 감축 비용 경감이 아니었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에 "이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수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의 뒷받침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머뭇거리다가는 저탄소 경제를 목표로 한 국제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이 깔려 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의 유럽 배출권 거래제로는 202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저탄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영국 정부에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마찰을 보장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영국산업연맹 기업환경국 러언 웰러 국장은 "영국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는 것은 탄소세나 직접규제 방식과 달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경제적인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민/강태은 신남기차

- 한겨레신문은 2012년 2월 13일 국내 부와 권력이 0.1%에 해당하는 재벌에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2012년 4월 18일 맥쿼리사의 잘못된 운영방안과 불공정계기로 인한 지하철 9호선의 적자문제를 보도했습니다.



김영서 국무총리(왼쪽부터) 허정우 전경원 회장, 이근희 삼성 회장, 김승연 현대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영우 이리산업 회장이 지난해 3월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경원 회장만민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재안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0.1% 재벌, 서민의 삶 포위하다

재벌개혁 시리즈 14편

삼성전자 갤럭시S2에 500억 원의 매출이 들어왔다. 회사원 김서민씨는 씨제이(CJ)의 옛 반과 김으로 아열을 매웠다. 재일부족의 부가 다스 정장을 입고 엘리베이터에서 에스오 코트를 팔아 걸친 김씨는 롯데 레저비즈니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나왔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김씨는 현대호텔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지하철은 스마트폰에 바뀐 승객들로 초만원이다. 에스케이(SK)텔레콤의 3세대(3G) 통신망이 부쩍 안라지는 데, 4세대(4G)인 LTE-Advanced가 바뀐 바퀴가? 걸간 고민하는 사이 회사에 도착했다. 삼성전자가 컴퓨터를 꺼고 일과를 시작했다. 아내 박선씨는 엘리베이터 전광표시기를 들고 집안 정소를 마쳤다. 남편은 운전이 끝나 간다. 전구들과 정실과 만나기로 한 박씨는 남편이 두고 간 현대자동차가 쓰나미의 시동을 걸

입고 먹고 쓰고 보고 듣고...
재벌 제품·서비스가 지배
30대 재벌 연매출 1134조
국내총생산의 96.7% 달해
부의 집중 넘어 사회 장악
무소불위 권력자로 고착화



었다. 기분이 떨어졌는데 '집 근처 씨제이(S)로 갔다. 정실은 씨제이부드빌의 '비비고'에서 먹고, 신세계 스타벅스에서 수다를 떨었다. 다 마트에서 둘러 현대카드도 결제하고 저녁 거리를 정했다. 삼성물산 레미안아파트는 한민택에서 두 시간 불만이 있었다. 일반 개인의 일상에서 재벌그룹은 공기와

같은 존재다. 어디를 가도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로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재벌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적으면 30개, 많으면 30개 정도다. 이들이 개인의 삶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오늘날 재벌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다.
원정관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분석

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재벌그룹의 전체 자산은 1960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1172조 원보다 300조 원 가까이 많다. 연간 매출은 113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96.7%에 이른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30대 재벌의 자산은 70배, 매출은 40배로 늘었다. 1990년대 들어 급속한 30대 재벌의 매출액은 2000년 들어 상승 속도가 주춤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급증했다. 재벌총수의 부가 급속하게 늘고, 재벌 중심 사회제도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롯데 등 5대 재벌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훨씬 심각하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의 분석을 보면, 국내총생산에 견준 5대 그룹의 매출 비중은 2001년 49.5%에서 2010년 55.7%까지 늘어났다. 1980~90년대 2세 승계가 이뤄진 뒤 갈라져 나온 친목그룹까지 포함하면 이들의 몸집은 두 배를 넘을 정도로

도다. 삼성·신세계·씨제이·보관·한솔 등 범 삼성그룹, 현대차·현대백화점·현대중공업·성우·한라 등을 아우르는 범 현대그룹, 엘지·지에스·엘스(LS)·희성 등 범 엘지그룹을 포함한 5대 재벌그룹의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 비중은 2001년 59.0%에서 2010년 70.4%까지 커졌다. 인구의 0.1%도 안 되는 재벌 총수와 일가친척들이 나라 경제력의 70%를 쥐고 흔드는 셈이다.
부의 집중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재벌은 일반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구축해왔다. 그 반대쪽에는 재벌이 짓눌린 99.9%의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불공정 권을 바라만 보는 자영업자들, 자부미 일간 마쳐 버린 중소기업들, 투과점과 담합으로 총주머니를 털리는 소비자들, 매일 구조조정 불인감을 안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김정현 기자 nohere@hani.co.kr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채권 탕

(2대 주주)

요금 50% 올리겠다는 민자 지하철 손익구조 보니

작년 영업손실 26억뿐인데 이자로만 461억 써
서울시 "이자율 낮추자" 제안...대주주들 거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 50% 인상'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던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운영 적자 상당액은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외국계 금융자본 맥쿼리와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챙겨가는 고율의 이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자사업자가 '누적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자본잠식 상태'라며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시민들의 발을 붙여 고율의 이자만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면기사 6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낸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업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0년분 운영수입 보조금

으로 326억원을 받고도 당기순손실 46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지만 이자비용으로 461억원이 뺏겼기 때문이다.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들은 회사에 대출금을 조달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겼다. 메트로9호선에 자금 4960억원을 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신한은행 등 6개 금융기업은 후순위대출 이율 15%, 선순위대출 이율 7.2%를 보장받고 있다. 맥쿼리는 이 법인의 자본 24.5%를, 신한은행은 14.9%를 보유한 2대, 3대 주주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순위대출은 보통 이자율이 5% 수준이고 15%의 이자율이면 후순위대출이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메트로9호선(주) 2011년 손익 현황	
영업 손실	26억원
영업외 손실	440억원
이자 비용	461억원
영업외 수익	21억원
당기순손실	466억원

며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하는 거라면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많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보증을 해주는 대신 이자율을 4.3%까지 낮추자고 협상에서 제안했지만, 민자사업자 측은 먼저 손익을 인상한 뒤에야 이자율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주주들이 고율의 이자 수입을 계속 챙기려고 이자율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합의 입장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아울러 메트로9호선은 각각의 주주들에게 얼마의 이자가 돌아가는지조차 '영업비밀'이라며 2년여에 걸친 협상 동안 서울시 측에 내놓지 않고 있다. 업체의 운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내줘야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민자사업의 명령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홍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책임인 구위원은 "적절한 금융비용을 살피지 않은 채 금융자본에 거액의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 구조여서,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챙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휴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사업자 중심의 운영구조 때문에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민자사업 전 단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umk@hani.co.kr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을 준수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한겨레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육

	활동	성과
<p>사회책임경영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기업 사회책임경영 평가 East Asia 30 • 아동친화경영 우수사례개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한국유니세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3개국의 사회책임경영 전문가 미팅을 통해 동아시아 특성이 반영된 사회책임경영 개념 확산 •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 아동권리 개념 접목해 아동친화경영의 중요성 확산
<p>사회책임경영 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기업은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문 • 서울시 교육청 금융기관 사회책임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통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 유도 •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p>사회적경제 연구·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교육청 사회적책임구매 증진 방안 연구 •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지원 사업 • 참여형 정책개발 연구 '미래와의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 확산 위한 정부기관 역할 증대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인식 확산
<p>교육 및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아시아미래포럼 개최 • 2012년 사회공헌프로그램 공모전 • 2012년 윤리적소비 공모전 • 금천구 사회적기업가학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MBA/청년혁신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책임경영의 개념 확산 •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을 준수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 내부 규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활동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책	시스템	성과
인권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기준 지지 • 한겨레 단체협약 5장 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제도 • 육아출산휴가 • 학자금 지원제도 • 임직원 4대 보험 • 주5일 근무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학자금 보조 시행 • 보건 및 안전 협약 규정 마련 • 1인당 직원 교육비 증가
노동 3,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기준 지지 • 한겨레 단체협약 조항 • 한겨레 취업규칙 16, 18조 • 한겨레 취업규칙 호봉규정 • 한겨레 단체협약 제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변동에 대한 상황 조치 • 인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 여성 및 소수집단 채용정책 • 육아출산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사업변동에 대한 단체협약 규정에 명시 • 노동조합 가입 비율 증가 (2012년 92%) • 정규직 및 여성직원 비율 증가 (2012년 정규직 99%, 여성직원 28%)
환경 7,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기준 지지 • 국제적 수준의 환경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공약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환경 책임 증진을 위한 공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절약 및 물자원 재활용 • 에너지 절감활동 (절감형 안정기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조명 변경으로 전기사용량 감축 • 안정기 교체로 인한 에너지 절감
반부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기준 지지 • 한겨레 윤리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위원회 • 계약서 개정 및 특약서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및 위반 건 수 없음 • 윤리위원회 1회 개최

복리후생

인권

원칙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공약

한겨레신문사에서는 2007년 8월 언론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제 5장 46조에 근거하여 '임직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계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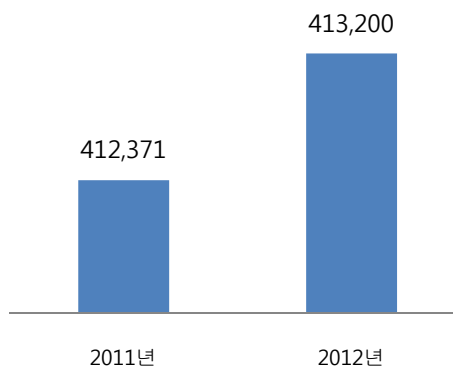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정기휴가, 여가생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윤택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학자금, 의료서비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과

임직원 건강검진 비율

2011년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세 이상 총 280명중 275명이 검진 (98%) 40세 이하 총 214명 중 204명이 검진(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502명 전체 검진(100%)

학자금 보조 (천원)



- 퇴직자에 대한 학자금 보조 2012년부터 시행 (18,531 천원 지급)
- 2012년 7월부터 보육수당 지급 (102,578 천원 지급)

육아출산휴가 사용 및 복귀·근무율

구분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육아출산휴가 사용 비율	남자직원	%	0건	3건	3건
	여자직원	%	11건	6건	5건
휴가 사용 후 업무 복귀율	남자직원	%		100%	67%
	여자직원	%	100%	67%	100%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	남자직원	%		100%	67%
	여자직원	%	100%	67%	100%

보건 및 안전

인권

원칙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공약

한겨레신문사에서는 2007년 8월 언론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제 5장 46조에 근거하여 '임직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계 및 활동

한겨레신문사는 '보건 및 안전 정식 협약 체결'을 통해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에 대한 외부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규정

구분		Yes	No
보건 및 안전 정식 협약 체결유무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정식 협약이 노동조합과 체결되었는지 유무	○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정식 협약이 다루고 있는 사항의 유무	개인 보호 장비 지급	○	
	노사 공동 보건안전 위원회 운영	○	
	보건 및 안전검사, 감사 및 사고 조사에 대한 근로자 대표 참여	○	
	교육 및 훈련 규정 비치	○	
	불만 사항 해결 체제 존재 여부	○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	○	
	작업장 안전 외부검증 프로그램 수행	○	

교육

인권

원칙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공약

한겨레신문사에서는 2007년 8월 언론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제 5장 46조에 근거하여 '임직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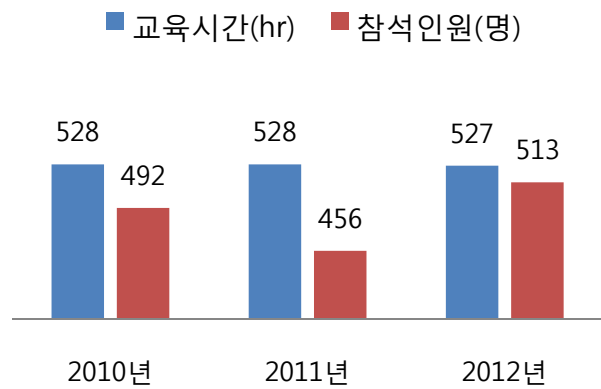
체계 및 활동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임직원의 현업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희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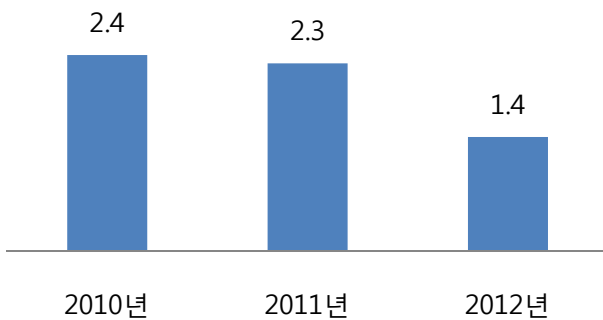
성과

교육 유형별 연간 건 수	사내	255
	사외	521
	기타	-
평균 교육비 (원)	58,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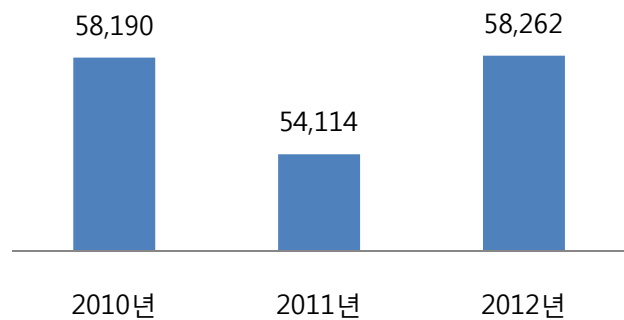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연평균 교육건수(시간)



직원 1인당 교육비(원)



노사협의회

노동

- 원칙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4: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5: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6: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공약

한겨레신문사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와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계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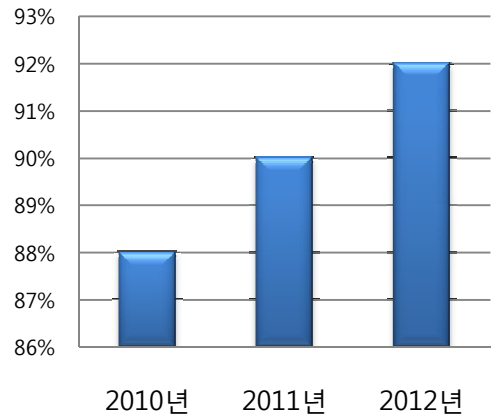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그 정당한 행동을 보장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를 매년 1~2회 열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인센티브 지급, 경영진 선출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단체협약 규정에 다양한 사업변동에 대한 조치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과

주요 사업변동에 대한 규정

주요사업변동	단체협약 규정에 명시여부	
	Yes	No
회사의 분할, 합병, 출자회사 설립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또는 타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 이에 따른 조합원의 신분 변동이나 근로조건 변경 때	○	
취업규칙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	○	
계열사간 전직, 격지간 전보시, 타 직종으로 전환 배치할 경우	○	
조합간부(조합규약상의 임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	
공개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는 채용시	○	
회사는 증면(혹은 감면), 새로운 매체 창간(혹은 폐간)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현저히 변경 시키게 될 때	○	

노동조합 가입비율(%)



구분	2012년
노조 가입 대상 구성원 수 (명)	543
노동조합 가입 구성원 수 (명)	500
노동조합 가입 비율 (%)	92

차별금지제도

노동

- 원칙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4: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5: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6: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공약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을 근거로 하여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체계 및 활동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함께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처리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직, 경영관리직 모두에게 평등하게 일괄 적용되는 단일 호봉제를 채택해 시행함으로써, 직군별 상대적 불평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성과

여성 및 소수계층 채용 우대정책

구분	채용 우대정책
여성	해당사항 없음
장애인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국가보훈자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채용 진행 시 보훈청에 의뢰해 특별추천서 접수
지역주민	해당사항 없음

차별금지 조치사항 및 내용

구분	Yes	No	내용
차별금지에 대한 제도 마련	○		성희롱 예방 지침 사규 제정 시행
불만/고충에 대한 내부 신고제도 운영	○		단협상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가동되고 있지 않음
차별금지를 위한 수시 진단 실시 (모니터링 프로그램)		○	인사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해 인사 전 영역에서 정책적 또는 의도적으로 여성이 차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차별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세스 운영		○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의 제기 조항 및 징계 조항을 두어 차별 사건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음
차별금지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		○	

임직원 고용

노동

- 원칙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4: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5: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6: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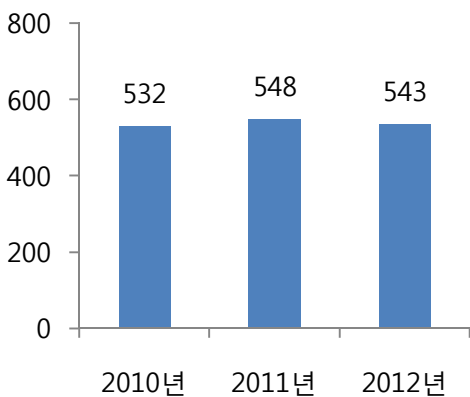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을 근거로 하여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체계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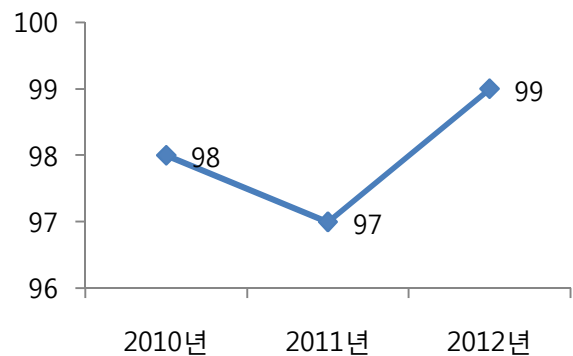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의 전체 임직원 고용은 2012년 543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그 중 정규직 비율은 전년 대비 2% 포인트가 증가한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평한 채용제도를 실시하여 여성직원 비율도 전년 대비 1% 증가하여, 여성 인적자원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

전체 직원 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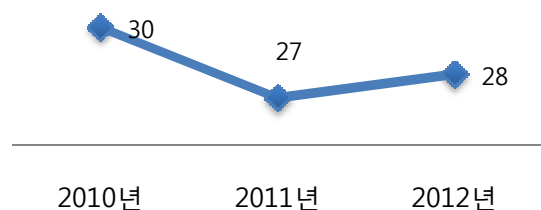


정규직 비율 (%)



	2010년	2011년	2012년
여성	159	150	154
여성 비율 (%)	30	27	28
장애우 (명)	4	5	5
국가보훈자 (명)	5	5	5
전체임직원 수 (명)	532	548	543

여성직원 비율 (%)



가스 및 물자원

환경

- 원칙7: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8: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9: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공약

한겨레신문사는 사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2007년 8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언론사 최초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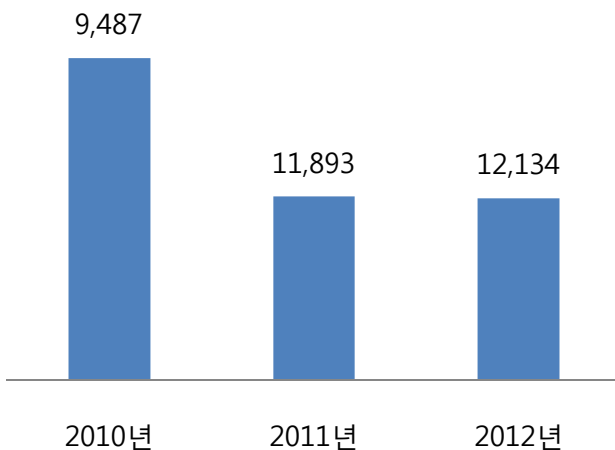
체계 및 활동

가스는 냉온수기(냉방,난방)가동, 운전실 난방, 겨울철 난방, 운전실 샤워용 온수, 세면대 온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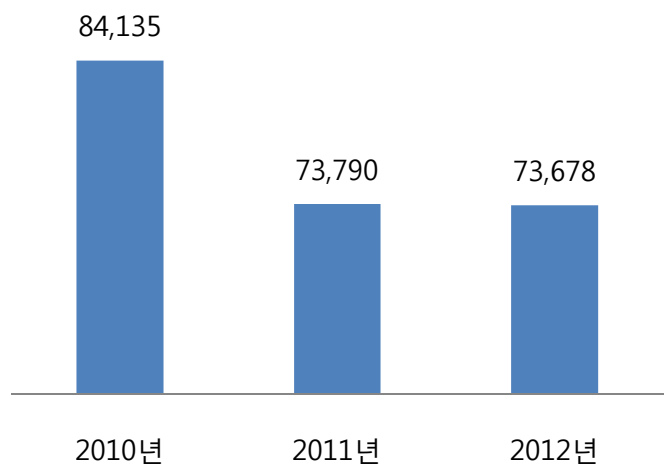
또한 상하수도는 시수와 정수로 나누어지는데, 시수는 세면대등에 사용하고 정수는 기계냉각수, 화장실좌변기, 소변기 등에 재활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겨레에서는 기계 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을 화장실에서 재사용하며, 우수의 경우 옥상에 저장하여 3층, 9층 정원수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

상하수도(m³)



가스사용량(m³)



에너지사용

환경

- 원칙7: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8: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9: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공약

한겨레신문사는 사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2007년 8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언론사 최초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계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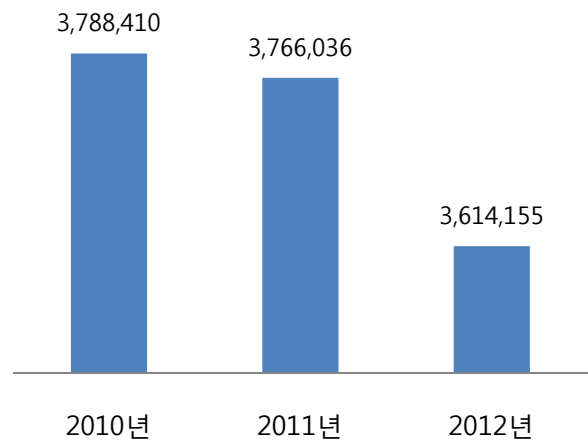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절감형 안정기 및 LED 조명 교체를 통해 2012년 약 6,840W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단, 전력사용량은 신문 및 외간발행의 생산 부수에 따라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성과

절감형 안정기 교체 통한 에너지 절감

회사내 복도 계단등을 LED13와트1등용과 LED13와트 센서형 1등용으로 총 24개 교체하여 약 6,840W 절약함

전기사용량(Kw)



윤리경영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약

한겨레신문사에서는 2007년 8월 언론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최초의 윤리강령을 만들어 업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한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체계 및 활동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사규에서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시행과 감시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국과의 거래관계에서 수 차례의 계약서 개정과 특약서 제정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의 설정 및 보증인의 한도 금액을 지정함으로써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성과

- 한겨레신문사에서는 관측 과정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문 지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위반 사항을 각 지국으로 개별 통보되기 때문에 혹시 파악하지 못한 지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 년간 법적인 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도 윤리위원회	
일시	안건 및 조치사항
2012년 09월 25일	안건 : 한가위 금품처리 관련 안내공지 및 윤리위원회 귀속 금품의 처리 방안 논의
	조치사항 : 윤리위원회 명의 안내 공지 메일 전 사원 발송 및 신고, 접수된 금품은 사회기부처에 접수하기로 전원 합의
	비고 :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 2조 1,2호에 따라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은 정중히 사절하되, 이를 되돌려 보내기 어렵고, 시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윤리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실제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 함

2012 한겨레신문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한겨레
THE HANGYOREH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빌딩
Tel: 1566-9595
<http://www.hani.co.kr/>